

#2021_금속노조_법률학교

법률 분쟁 시 대응 방향



법



#형사절차 (수사, 형사소송)

#형사 외 소송절차(민사소송, 행정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산재보험급여 신청절차

#기타 노동부 신청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 법률분쟁의 유형과 상호관계

형사 분쟁 (경찰, 검찰, 형사법원)

법을 어겼는가?
(국가에 의한 처벌)

- ▷ 유죄 또는 무죄
- ▷ 수사와 재판
- ▷ 검찰(+경찰) VS 피고인

민사 분쟁 (민사법원)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있나?

- ▷ 개인/단체 사이의 분쟁
- ▷ 본안소송과 보전소송(가처분 등)
- ▷ 원고 VS 피고

행정 분쟁 (고용노동청, 노동위, 행정법원 등)

행정관청의 처분을
요구 또는 취소

- ▷ 신고, 민원, 진정, 신청 등 행정절차
- ▷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 ▷ 원고 VS 피고(행정청) + 피고보조참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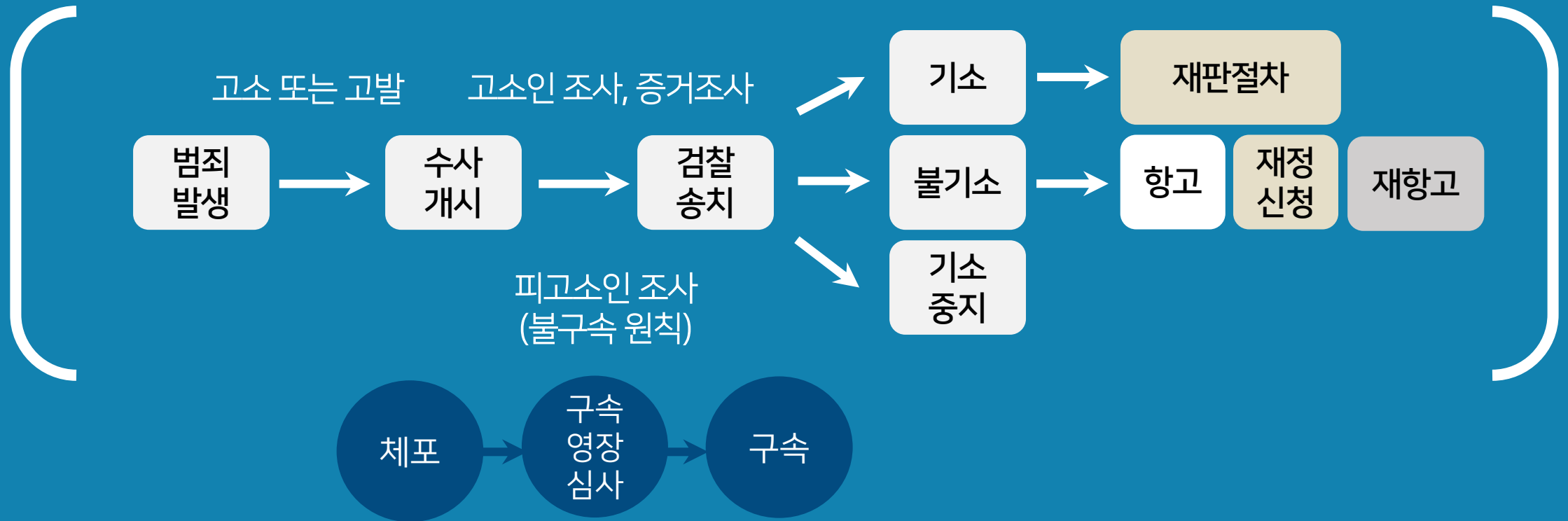
형사 절차 : 수사단계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20주년



죄명	법정형	선고형
집시법위반	주로 벌금형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벌금
특수공용물건손상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명예훼손/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퇴거불응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에서 집유
특수주거침입 (단체다중, 위험한 물건)	5년이하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2분의1 가중)	벌금에서 집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3년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형사 사건 수사의 흐름





■ 고소 또는 고발, 진정

친고죄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후 6개월 내에 고소해야 기소 가능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폭행,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일반임금체불 등

유의 사항

형식과 제출방식 자유, 고소(발)인 신원과 피고(발)인의 신원, 증거 등

검찰 고소(발)은 6대 중요범죄와 경찰 관련 범죄만 가능

출석요구서

출석자 : 이 []

출석요구일시 : 2017.04.18. 09:30

피고소인 엘 [](주)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지참서류 : 1) 금품 미수령 근거
2)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3)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02-3282-9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과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교통편: * 지하철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3번출구(구로이마트점 맞은편)
* 버스 간선버스 5536, 5628, 6612번, 마을버스 01, 09번

2017년 4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특별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김 []



고소인 조사 주의사항

신속한 사건 처리 주문하기

고소 취하나 합의는 신중하게

증거확보와 정리, 추가제출의 중요성

■ 피의자로서 조사받기 전 : “임의수사” 원칙

1

조사 일정은 경찰과 협의

2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

충분히 준비해서 조사받기

■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 “졸지 말자” 원칙

1

진술거부권과 필요최소한의 답변

2

인권침해, 참지말자

3

진술조서 꼼꼼히 확인하고 도장찍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redacted]

위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1. [redacted]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redacted]은 사법경찰리 경장 [redacted]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redacted]

주민등록번호는 [redacted]

직업은 [redacted]비정규직노조원

주거는 [redacted]

등록기준지는 [redacted]

직장주소는 [redacted]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redacted]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네 [redacted]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 [redacted]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 [redacted]

문 : 위 스티커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외벽에 부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도 위 건물 외벽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나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위 집회가 개최되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청사 건물 외벽에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하던가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이 청사 외벽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도 청사 외벽을 향해 계란을 투척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아니요.

문 : 위 건물 청사 외벽에 스티커 부착과 계란 투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사전에 위 건물 청사 외벽에 스티커 부착과 계란 투척을 하자고 계획한 것이
가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2018. 11. 6.

사법경찰관 경위



사법경찰리 경장



■ 체포, 아무나 막 잡아갈 수 없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 죄에 대한 상당한 의심
- ▷ 출석 요구 불응 (우려)



긴급체포

- ▷ 징역 3년 이상의 중죄 혐의
- ▷ 증거인멸/도주(우려), 긴급성



현행범 체포

- ▷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 ▷ 추적 중, 흉기, 묻지마 도주 ...

■ 체포 시 경찰의 준수사항과 대응

영장, 체포시각, 미란다 원칙 확인

체포 >>> 유죄? NO

√ 인권침해에 항의하기, 변호인 접견 요구, 진술거부권

√ 체포 후 소지품 압수에도 영장이 필요

√ 조사는 변호사 접견 후에 받기

체포 시작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가족 등에게
체포사실 통지

48시간 제한
(→ 구속영장청구?)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려면

- (1) 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
- (2) 증거 인멸, 도주 우려
- (3) 기타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 요건]

재판 전 최대 30일 구속 가능

- (1) 경찰에서 최대 10일
- (2) 검사 최대 10일 (단, 1회 10일 연장가능)

[구속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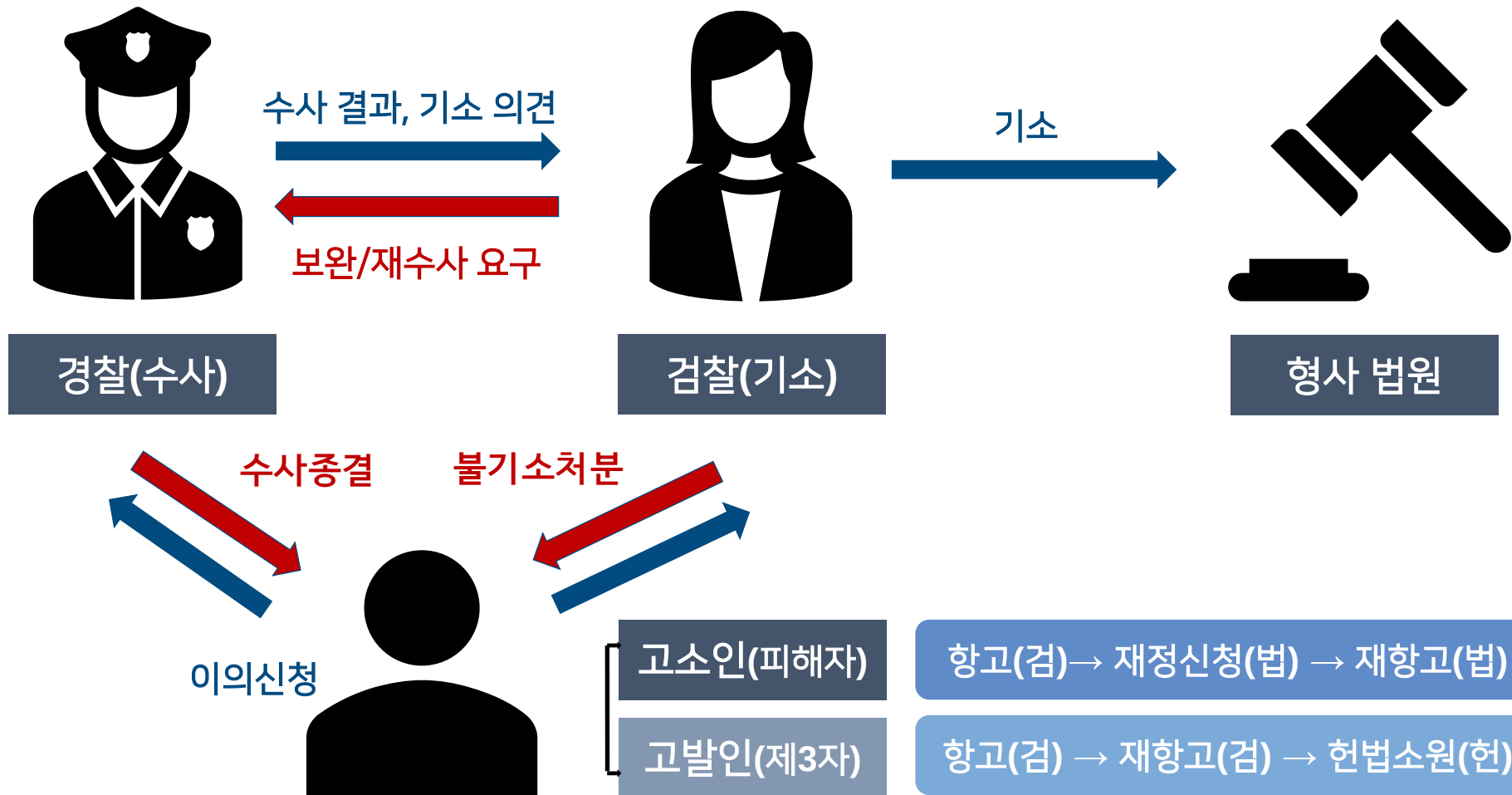
[구속 전 피의자심문]

- (1) 구속영장 발부 전 필수 절차
- (2) 판사가 사유 있는지 심문해 영장 발부
- (3) 가족, 노동조합, 변호사 등의 대응 중요

[구속(체포)적부심사제도]

- (1) 이미 체포-구속된 경우, 다시 판단 요청
- (2) 판사가 체포-구속의 적법성, 필요성 심사
- (3) 심사 시점의 사정 변경 고려

■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기소



[illegible]

불기소처분 통지서

공소권 없음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ex.정당방위

기소유예

기소중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 12. 21.

사건번호 2017년 형제14747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도형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 1.가,나 하
- 2.나 김
- 3.나 장
- 4.나 김
- 5.나 김
- 6.나 최
- 7.나 정
- 8.가,나 정
- 9.나 오
- 10.나 김
- 11.나 김
- 12.가,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대표이사: 하)
- 13.가,나 주식회사 지티에스(대표이사: 정)

II. 죄 명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III. 주 문

피의자들은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정** 은 주식회사 지티에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9. 4.경부터 2015. 6.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주식회사 지티에스 근로자 178명을 원청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인 콜드공정 및 GUT 공정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피의자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지티에스'라고 한다)는 피의자의 대표이사였던 위 정 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 **피의자 하** 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9. 4.경부터 2015. 6.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지티에스 근로자 178명을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인 콜드 공정 및 GUT 공정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4. **피의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아사히초자'라고 한다)는 피의자의 대표이사였던 위 하 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대응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소속 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 . .	사건번호	0000-000000
좌명			
결장일			
결장종류	불송치 ()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과 ○○팀 경○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소속 관서 장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불송치 통지요구서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구 사유	
비고	

「검사와 사범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송치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관서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통지서

103158000_0000136_02_04 / 1_398

경북경주경찰서

제 2021-00295 호

2021. 3. 10.

수 신 : 김철송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2020. 11. 13.	사 건 번 호	2020-006827
죄 명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제물손괴등) 나. 업무방해		
결 정 일	2021. 3. 9.		
결 정 종 류	불송치 (혐의없음)		
주 요 내 용	별지와 같음		
담당 팀 장	지능범죄수사팀장 경감 이상섭	☎	054-760-0267

※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제」에 심의신청

경북경주경찰서장



103158000_0000136_04_04 / 1_400

【 주요내용 】

2020. 12. 5.자 한수원 CCTV카메라 공동손괴, 12. 5.자 수리업무 방해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대응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 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경찰 결정 내용

사건번호	-
죄명	
결정내용	

□ 이의신청 이유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류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사 건 2017고약189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형제78344)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주 형 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선택)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 9. 20.

판사

김



[양식 1]

기아차(주) 회장
수원리민

정식재판청구서



사건	2016 고약 [redacted] 일반교통방해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 [redacted] 송달가능한 주소 : [redacted] 전화번호 : [redacted] 휴대전화: 010- [redacted] 이메일 주소 : [redacted]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 04 . 28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V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확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저는 상급 [redacted] 물리적 [redacted] 일반도로교통법에 해당한다고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redacted] 야 한다 [redacted] 빈틈없이 하고 시민들의 교통을 먼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 조차 시위하는 사람과 함께 일었습니다. [redacted] 면 도로를 [redacted] 경찰 차 [redacted] 해로 처벌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벌금도 일반봉급자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오니 선처바랍니다.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 검찰, 법원명) : [redacted] 사건번호 : [redacted]]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2016 . 5 . 3 . 청구인 [redacted] (피고인과의 관계: 본인)

송달 후 7일 이내

형종상향금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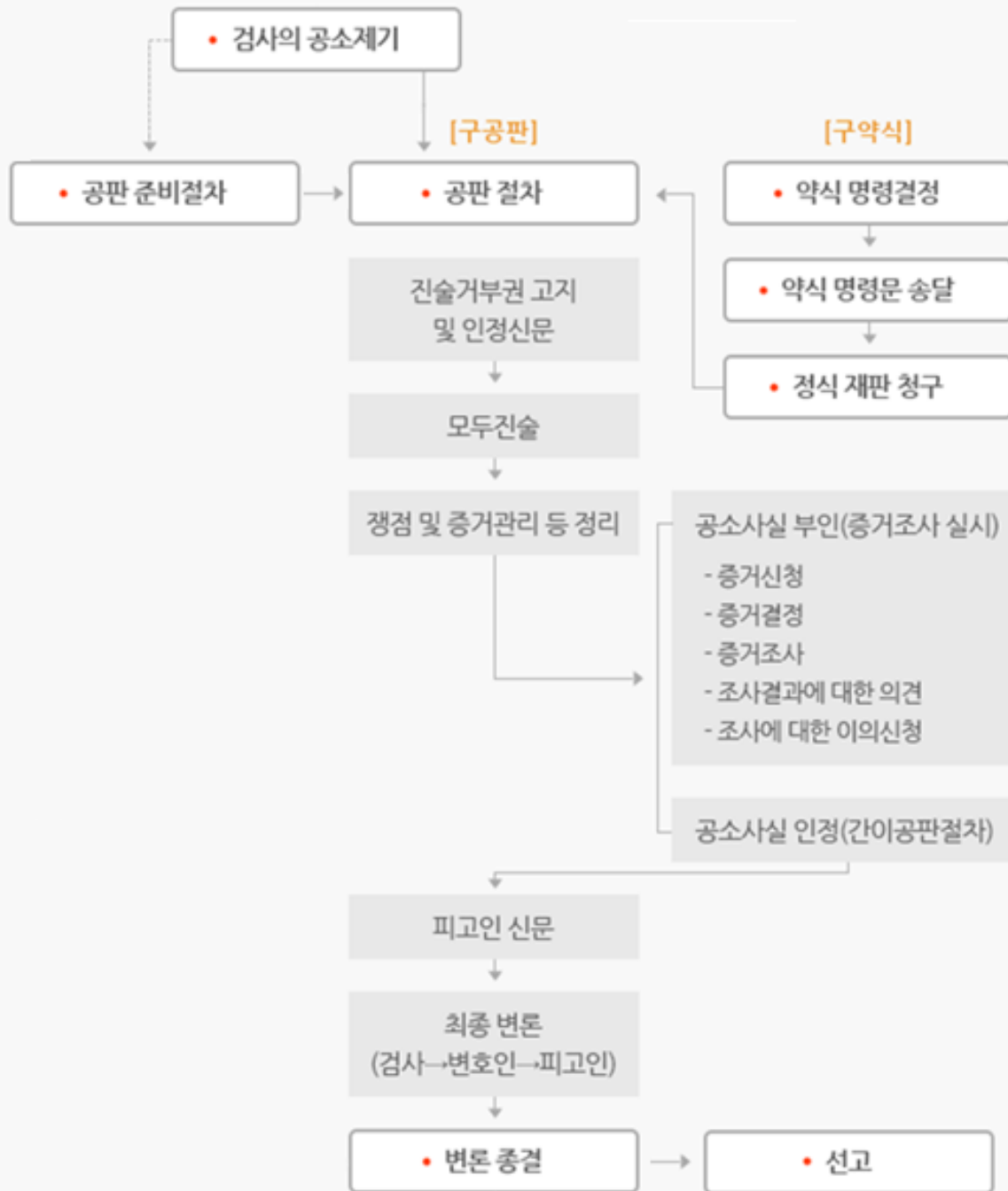
변론, 판결문의 “이유”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20주년

형사 절차; 재판단계

김영수
대법원장
헌법 요청서



■ 형사재판(공판) 절차

유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 공소기각 / 면소

I. 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경우

Ⅱ.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량 저장, 재가공 등 자료수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송달로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파산사건은 2017. 3. 1.일부터 서울화생법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합

당사자명 필수입력

☐ 사건번호입력모드

146523

새로고침

음성듣기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하

검색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안해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

이영주

선택

기본내용

청사배치

사건번호	2018고합87		
피고인명	이영주	재판부	제33형사부(다) (전화:02-3415-3356)
접수일	2018.01.23	증국결과	
형제번호	2018형제2		
상소제기내용			

최근기일내용

상세보기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18.02.22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기일변경

나의 재판상황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정보]-[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보석 :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 받기

1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해

2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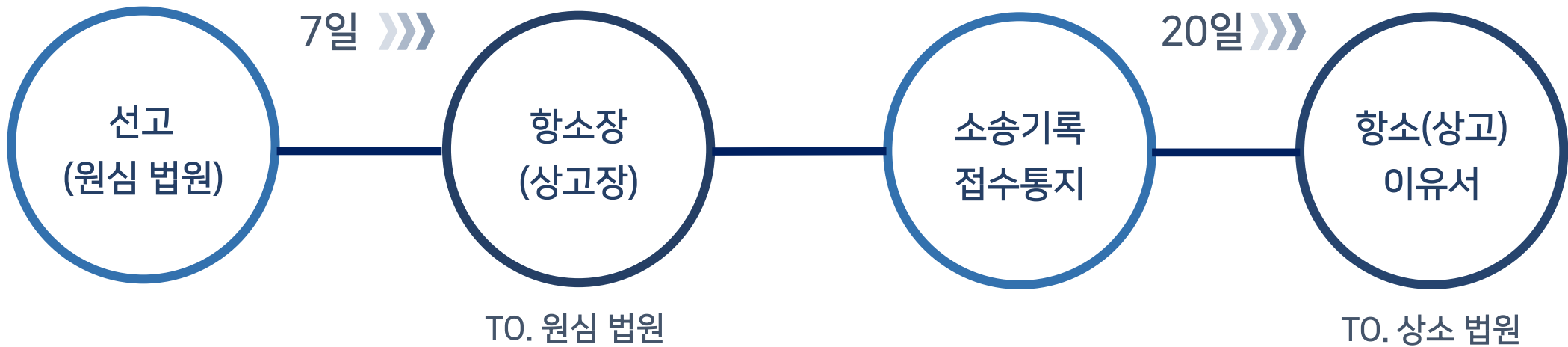
3 구속의 집행을 해제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보증금 10,000,000(일천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 10,000,000(일천만)원은 법무법인 여는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문수하는 수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00(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형사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상고=상소)

기간 준수!!



민사/행정 소송



■ 민사소송/행정소송의 흐름

[민사소송]
해고무효
확인소송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
임금 청구

사용자 상대
(민사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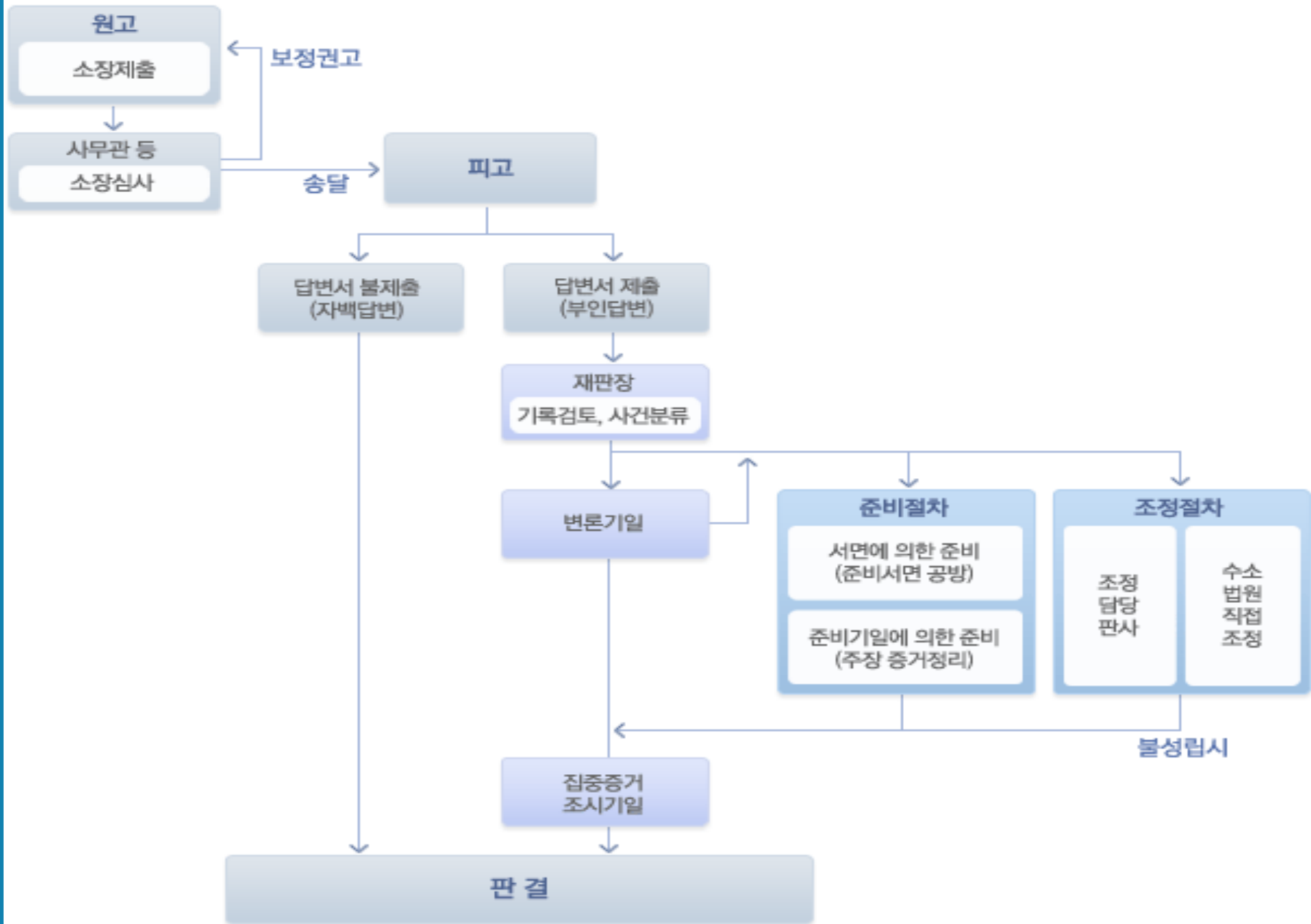
[행정소송]
(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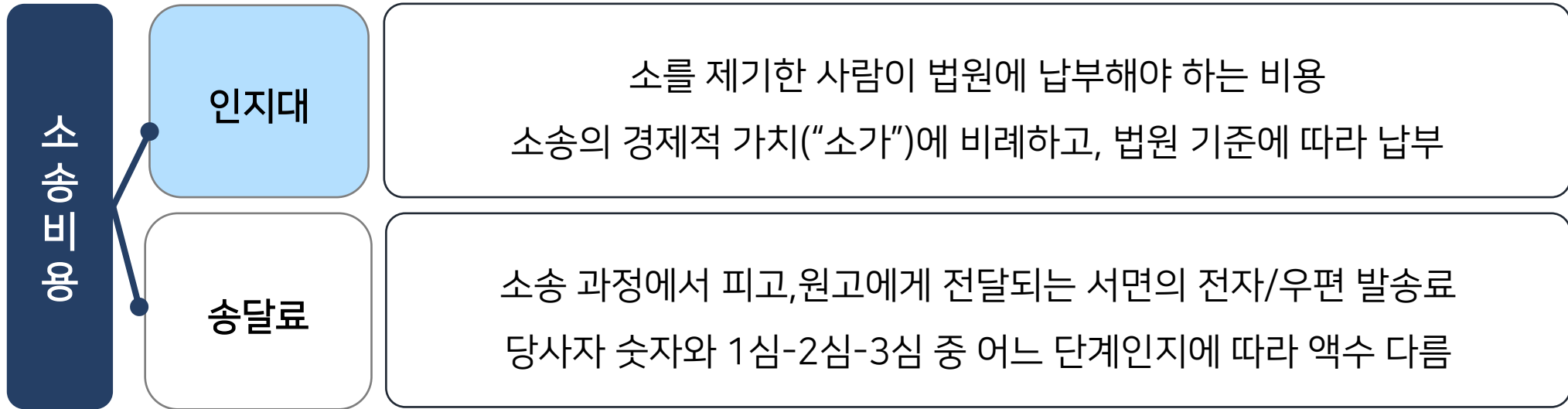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재심취소소송
(행정법원)



■ “소송비용”의 계산 (소 제기 전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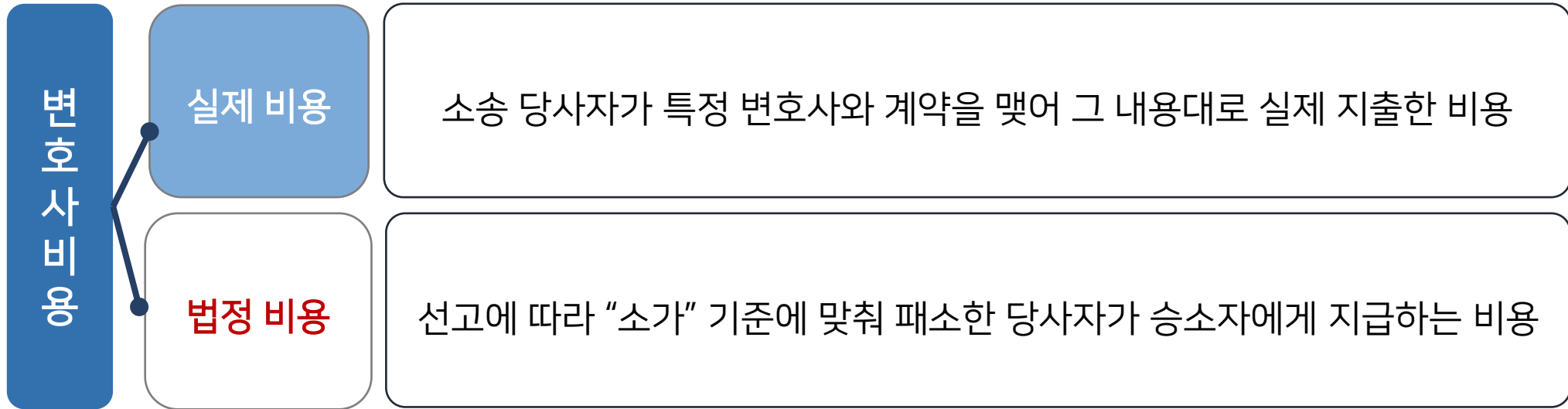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ECFS interface for calculating the filing fee. The "인지액 계산" (Filing Fee Calculation) tab is selected. The form includes the following fields and values:

- 소가 산정 (Filing Fee Calculation)
- 인지액 계산 (Filing Fee Calculation)
- 가사수수료 계산 (Domestic Fee Calculation)
- 송달료 계산 (Delivery Fee Calculation)
- 1. 인지액 계산하기 (Calculate Filing Fee)
- 사건 종류와 소가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Enter case type and filing fee, then click the calculation button.)
- 소송 유형 (Case Type): 민사 (Civil)
- 사건 종류 (Case Type): 민사1심사건 (Civil 1st Instance Case)
- 소가 (Filing Fee): 50,000,000 원 (오천만 원)
- 계산 (Calculate)
- 인지액은 207,000원 (이십만칠천 원) 입니다. (10% 할인된 금액) (The filing fee is 207,000 won (207,000 won). (10% discount amount))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ecf>

[바로가기]-[소송비용계산] 메뉴

■ “변호사비용” 등의 계산 (선고 후 정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text{만원} + (\text{소송목적의 값} - 300\text{만원}) \times \frac{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 민사/행정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상고=상소)



기간 준수!!

일반
사건

판결문이 송달
된 날부터 2주
이내

» 원심 법원

(단, 상고이유서의 경우 제출기한 있음)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원칙) 20일 » 상소 법원

가처분
사건

신청인

즉시항고(7일)

피신청인

이의신청 →
즉시항고(7일)

재항고(7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노동위원회 업무

주요심판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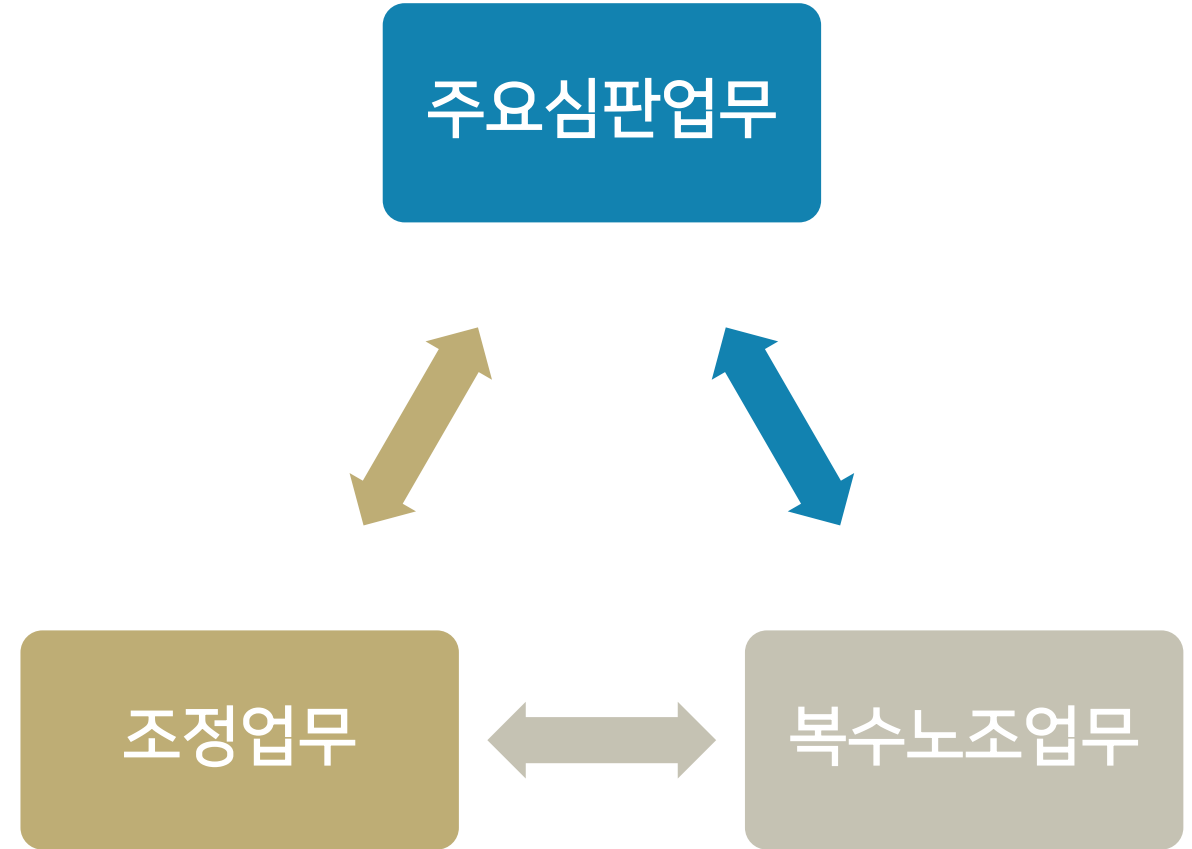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

조정업무

노동쟁의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

복수노조업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
교섭단위 분리신청,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 부노부해 등 구제신청

1

부당해고등(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2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82조)

3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 제기

■ 부노부해 등 구제신청

4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년, 복직, 퇴사 등)

5

부당해고 '등' =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계

6

상시 5명 이상 노동자 사업장만 신청 가능



■ 판정 등 결과

화해

심문회의 시작 또는 도중 화해를 권고하여 이에 응한 경우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 와 같음(수정, 불복 불가)

판정

인정 = 구제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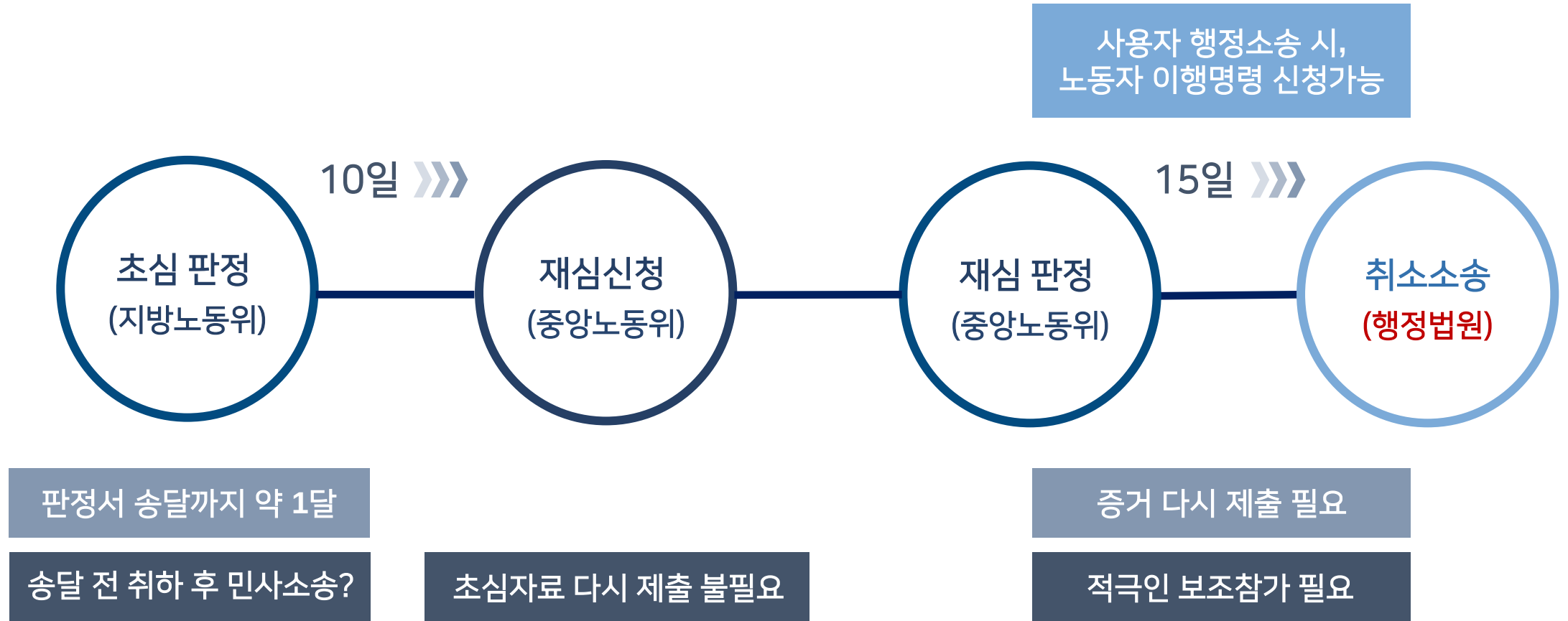
기각 또는 각하

결과 통보

심문회의 직후인 의결일 당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판정서는 심문회의 후 1개월 내 송달(송달 전 취하 가능, 송달 후 불복 가능)

■ 불복 절차



산업재해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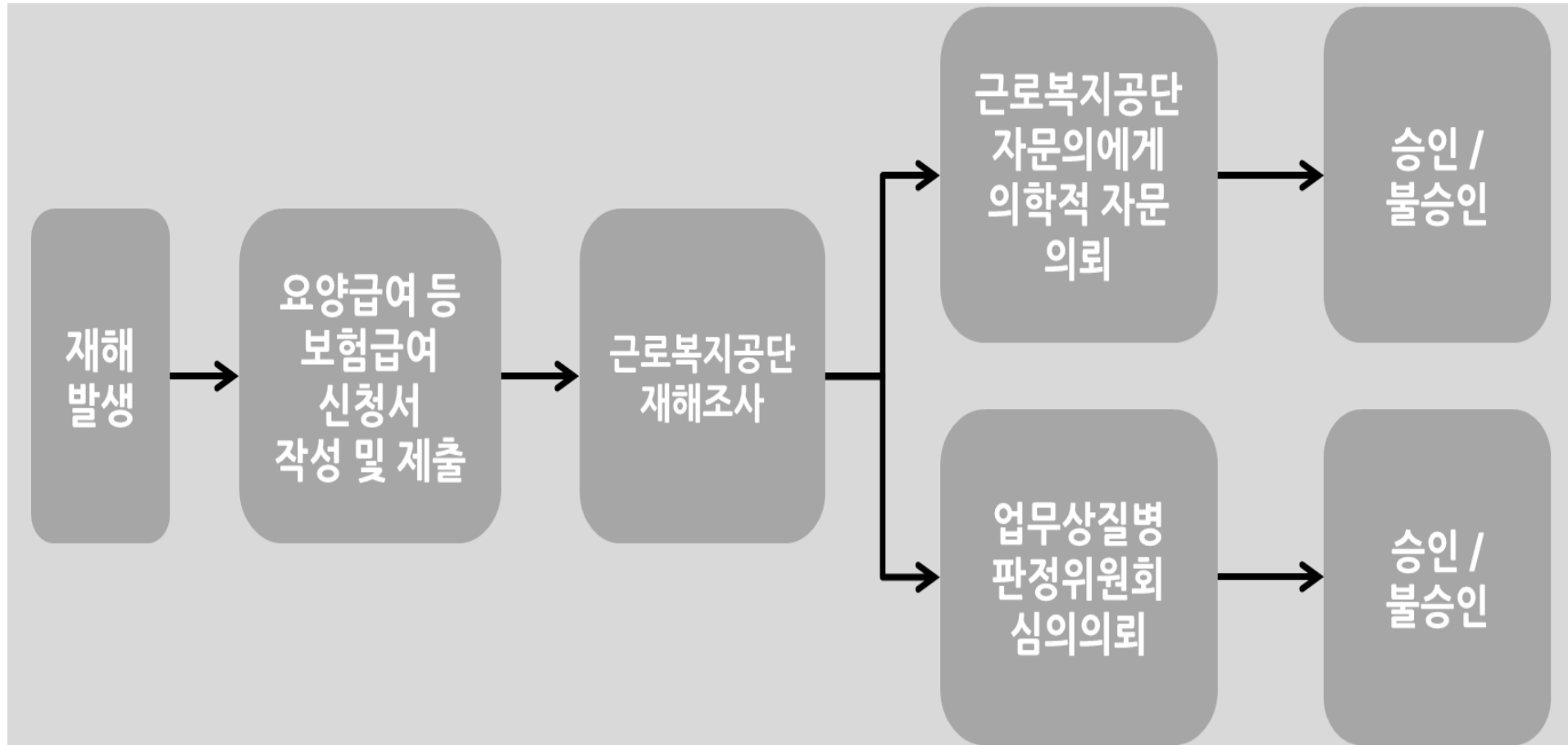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고 이선희군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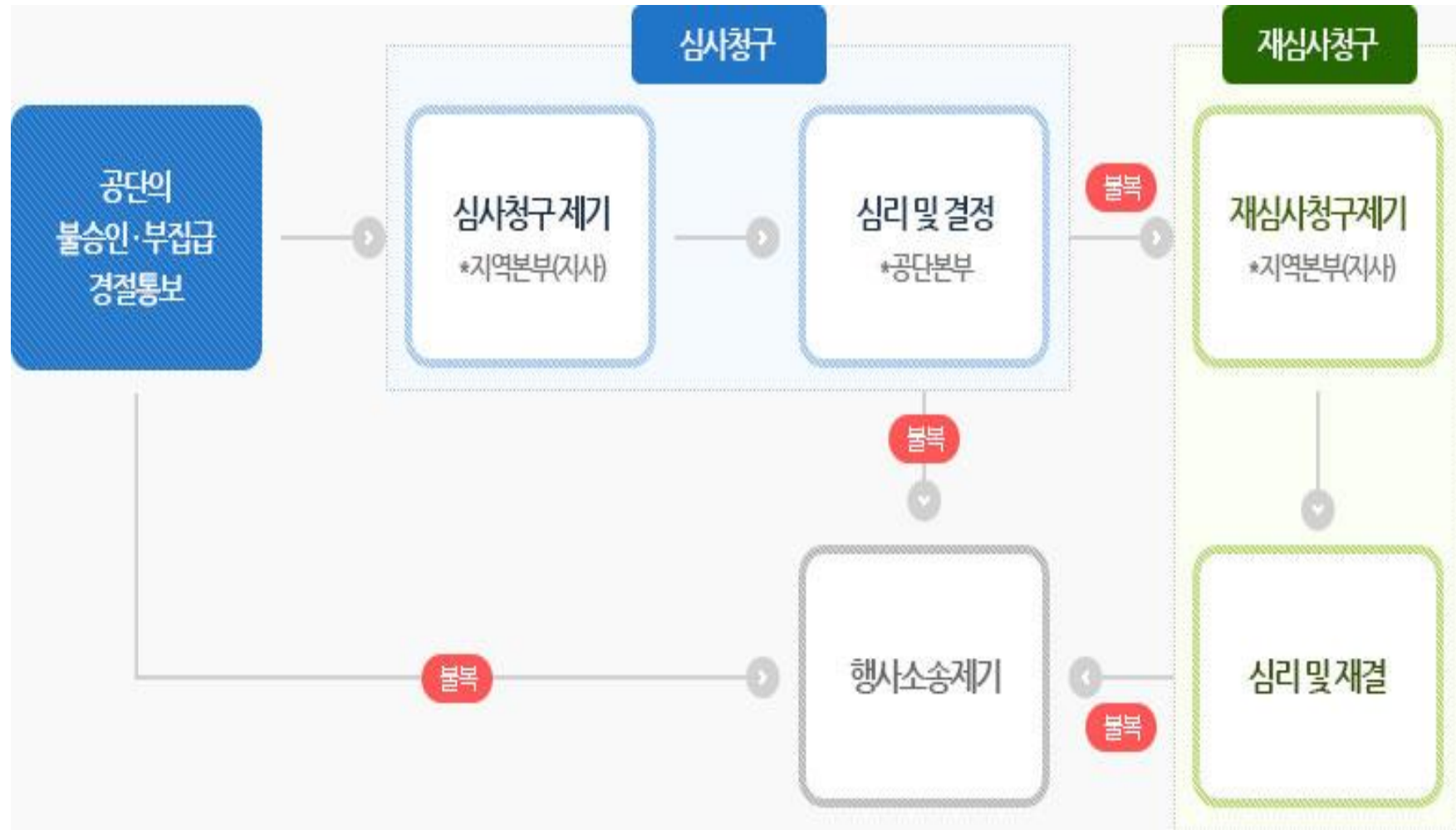
일시 : 2021. 5. 6. 오전 10시30분

고 이선희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평택농민회,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청년플랫폼피:움, 평택평화센터, 홍사단평택안성지부, 재단법인 와글, 더피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평택노동권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산재보험급여 신청



■ 산재신청 이의제기



■ 산재신청 관련 서류

○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내부 서류를 확보하기

: 재해조사서(재해조사시트), 공단 자문의 소견서,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서, 문답서 및 제출자료, 역학조사회신, 업무상질병판정서

- 행정소송 제기 전 : 근로복지공단(지사) 정보공개청구
- 행정소송 진행 중 : 근로복지공단(지사)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신청 내지 문서제출명령신청

검색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공단연혁



주요기능 및 역할



조직안내



찾아오시는길

근로복지공단 바로알기!

이사장 인사말

체계도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



서식자료

민원/조회서비스

전자팩스 수신조회

채용정보

보도자료

공지사항

고시규정세칙

사전정보공표

더보기

세계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

팝업존

2021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 공모전



재난기부금
영수증발급
바로가기

카드뉴스

2021년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 공모전

동영상



사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인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자주 찾는 서비스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개인별 부과고지보
험료 조회정산보험료 예상금
액 조회부과고지 보험료 조
회

보험료 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신
청화면안내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취득(고용)신고

근로내용·노무제
공내용 확인신고

의료기관

최초/전원요양신청
서진료계획서/집중재
활진료계획서

휴업급여 청구



요양비 청구



공단연계업무처리



산재환자 정보조회



전자통지

진료비/약제비청구
목록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고용·산재보험 자
격 이력 내역서개인별 부과고지보
험료 조회

휴업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산재보험 근로자 고
용정보 확인서보험급여지급확인
원

심사청구서 작성

고용노동부 신청 절차



■ 사업장 근로감독 요구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노동부는 위반사항 처리 외에도 노동법 위반 등을 사전 예방, 감독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조사요구 가능

■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



정기근로감독

- ▷ 매년 불량 사업장에 실시



수시근로감독

- ▷ 법령 제/개정, 사회적 요구로 실시



특별근로감독

- ▷ 단협 위반 등으로 노사분규 발생 시
- ▷ 다수 인원 임금미지급, 상습 체불 등
- ▷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 법령 질의가 필요한 경우

1

현장에서 단체협약 등의 해석 다툼이 발생

2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

3

노동부의 권위를 교섭이나 투쟁에 활용할 때

■ 법령 질의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문, 전화, 방문 등

2

고용노동부 본부 해석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

3

회신에 14일 정도 소요, 위법사항 시정 조치

■ 법령질의 시 유의사항

1

대립되는 견해 소개 후 무엇이 맞나 질문

2

불리한 회신 가능성이 높으면 질의 취소

3

구체적으로 물으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의 특징

1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있으면 각하

2

사법기관, 노동위원회보다 구제 사유 넓음

3

사회적 파급력이 있어 여론 형성 등에 유리

■ 진정 사유

진정
사유

국가기관, 구금/보호시설로부터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법인, 단체, 일반인으로부터의 차별행위

"인권"

헌법 및 법률,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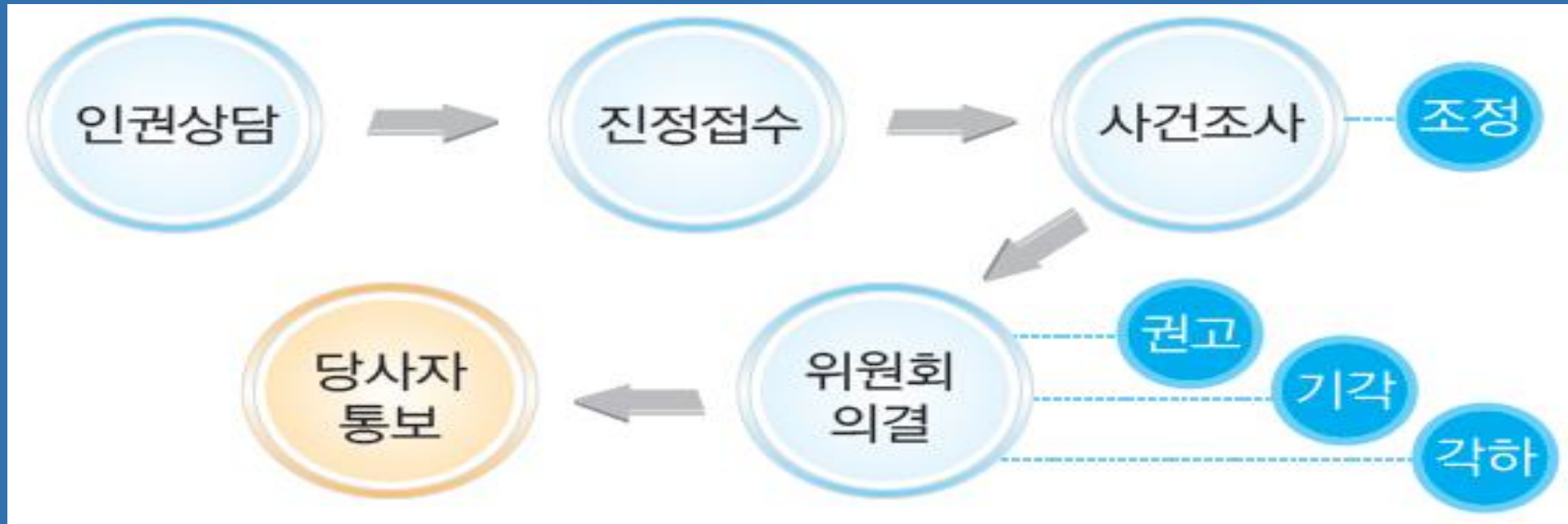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차별"

고용, 재화와 용역의 이용, 교육훈련의 기회 등과 관련한 우대 또는 배제

성희롱 :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또는 관련 요구 불응으로 불이익 주는 것

■ 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절차



■ 결정의 종류

권고

행위중단, 구제조치 등 시정 권고; 수사의뢰

각하

시간 경과, 다른 절차 진행 등; 이송 가능성

기각

입증부족, 차별/침해 아니거나 이미 회복

연합뉴스

인권위 '쌍용차 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

"인명피해 위험 커...조사관 6명 현장 파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긴급구제 조치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진압작전으로 이미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경찰은 농성자와 진압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하라"라고 강조했다.

■ 긴급구제 조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개연성

긴급한 필요성

진정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

다양한 긴급구제 조치 가능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등

별표·서식

학칙·규정

법령기타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법령/자치법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Q

1948년 이전 공포법령 중 원하시는 법령을 찾지 못한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보세요

국가기록원

검색

기관별	분야별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자치법규 위임법령 개정알림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료도로관리권등록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2.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	2018.2.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교육부	부산광역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18.2.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법률정보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중앙노동위원회

케이스노트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검색



감사합니다.